



읽는 사람이 세상을 이끈다 Readers are Leaders

## AI기본법 전면 시행...뉴스 저작권 보호책은 미흡

### 저작권단체 “정당한 보상 기준·사용내역 공개 필요” 한목소리

지난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이 전면 시행됐다. 이는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도입된 AI 관련 법률이며, 전면 시행 기준으로는 세계 최

초다. AI 기본법이 조기에 시행됐으나 일부 규정의 모호성과 제도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관련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 기준을 둘러싸고 저작권자와 AI 기업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6일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을 발표하고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사전 허가 없이 데이터를 활용하되 사후에 보상하는 이른바 ‘선(先) 사용 후(後) 보상’ 방안과 저작권 면책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저작권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저작권 관련 단체들은 지난 1월 15일 열린 ‘AI 전략위원회와 저작



권 관련 협단체 간담회’(사진)에서 AI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방안이 미흡하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신문협회 디지털협회의회 신한수 회장(서울경제 전략기획실 부국장)은 이날 “AI 활성화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선사용 후 보상’ 제도는 명확한 원칙과 철학 아래 논의돼야 한다”며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선사용 후보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는 공공재적 성격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저작권자의 사유 재산인 만큼, 이미 사용돼 효용이 감소한 이후 보상하는 방식

이 과연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작권자의 관점에서 데이터 이용 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며, “AI 윤리 차원에서도 저작권 데이터가 AI 모델 개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세부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시열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는 “AI 발전을 저작권자의 희생을 전제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그 동안 공정이용 논의에 저작권자의 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용 데이터의 정당한 대가 마련과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재홍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

장은 “공정이용이라는 명목 아래 저작권자의 자산이 무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공정이용의 범위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가 추진되면 저작권자들의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AI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현행 AI 기본법을 개정해 저작권 보호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신문협회는 지난해 10월 15일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은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자가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출처를 요약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AI 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학습데이터 공개의무 조항을 추가하고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포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신문협회는 또 지난 1월 2일 위원회에 전달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지속가능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결과제로 ① ‘AI 학습 목적 저작권 면책’ 조항 도입 전면 철회 ② AI 기업의 ‘학습 데이터 투명성 의무’ 법제화 ③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 ④ 실효성 있는 ‘기술적 보호 조치’ 및 ‘옴트아웃’ 표준 제정 ⑤ 공정거래법상 지배력 남용 행위 조사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저작권자가 명확하고 거래 시장이 형성된 저작물에 대해선 ‘선 사용 후 보상’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뉴스, 출판, 신문, 음악, 영상 등 신작관리 단체가 존재하는 등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해선 ‘사전 협의에 기반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 2026년 한국신문상 공모에 34건 접수

뉴스취재보도 8건, 기획·탐사보도 26건  
4월 7일 신문의 날 기념대회서 시상

### 2026 한국신문상 응모 건수

※1월 30일 16시 기준

구분	재경사	지역사	계
뉴스취재보도 부문	6건	2건	8건
기획·탐사보도 부문	12건	14건	26건
계	18건	16건	34건

신문협회가 2026년 한국신문상 후보작(지난해 1~12월 신문보도)을 공모한 결과 총 34건이 접수됐다. 부문별 접수 현황은 △뉴스취재보도 부문은 8개 회원사에서 8건, △기획·탐사보도 부문은 23개 회원사에서 26건이다(표).

한국신문상은 매년 뛰어난 보도 활동을 통해 한국 신문의 발전과 언론창달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심사위원은 미정이며, 최종 수상

작은 3월경 심사위원들의 개별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수상작은 부문별로 최대 2건(뉴스취재보도 부문 재경회원사 1건·지역회원사 1건, 기획·탐사보도 부문 재경회원사 1건·지역회원사 1건)이다.

시상식은 4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제70회 신문의 날 기념행사에서 열리며, 수상자는 부문별로 상패와 상금 500만 원을 받는다.

뉴스취재보도 부문: 8건 (재경 6건, 지역 2건)			
신문사	내용	신문사	내용
경향신문	통일교 관련 ‘정교유착’ 의혹 최초 보도	조선일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북한군 포로 2명 세계 첫 인터뷰
매일경제	국민 신뢰 저버린 선거관리위원회	한겨레	권성동, 세 차례 압박에 필리핀 EDCF 사업 뒤집혔다
서울경제	韓-웨스팅하우스 원전 지식재산권 불평등 협정 연속 단독 보도	부산일보	사전 우주항공청인데... 주요 기능·행사는 다른 도시?
연합뉴스	기다리던 집으로	영남일보	경북 안동지역 고교 시험지 유출 사건 단독 보도
기획·탐사보도 부문: 26건 (재경 12건, 지역 14건)			
신문사	내용	신문사	내용
경향신문	남태평양을 넘어	경인일보①	일제 법정에 맞선 독립운동가
뉴스1	노화역전의 꿈	경인일보②	‘자국’ 없는 아이들, 자격을 묻다
동아일보①	누락: 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신가요	국제신문	낙동강하구 0.9°C의 경고
동아일보②	힌트: 치매머니 사망	매일신문①	날아보니 행복이다
매일경제	보이스피싱 20년 잔혹사	매일신문②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문화일보	베이비붐 1세대 ‘인생 2막’ 리포트	매일신문③	[송고한 나뭇, 기적 같은 선물] 시리즈
세계일보	매니페스토, 내일을 바꾸는 약속	매일신문④	대구고립보고서
아시아경제①	건설위기 보고서	울산매일 강원도민일보 경북매일	동해선 K-관광의 미래 ‘로컬들 매력을 잇다’
아시아경제②	교육 대전환 시리즈 <한국의 교육, 길을 잃다><대학 대전환>	울산매일	소외지역에 소문난 ‘소소한만능배달관’
중앙일보①	실록 윤석열 시대	인천일보	Fromyou x 빈터뷰 Season 2 - 독자가 선택하고 완성하는 새로운 지역 내러티브
중앙일보②	2025 자영업 리포트	전북도민일보	결어서역사속으로-왕의 길을 걷다
한국일보	자녀 살해 후 자살: 비극을 기록하다	전북일보	지역소멸 위기 극복 프로젝트 <청년 이장이 떴다!>
경기일보 광주일보 영남일보 충청투데이	지방의원 공약 추진단, 광역의회를 바꾸다	중부매일	김진균 청주시체육회장 출연금 의혹 검증

## 신문협회 제359차 이사회 개최

### 2월 27일 프레스센터

신문협회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제 359차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보고·결산 △2026년도 사업계획·예산 안 △임원선임위원회 구성 △회원가입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2025년도 사업보고·결산과 2026년도 사업계획·예산안은 이사회 승인을 거친 후 3월 20일 열리는 신문협회 제64차 정기총회에 상정한다.

# 뉴스 가치 약탈하는 AI 방치해서는 안된다

기고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정부 없는 신문과 신문 없는 정부 중 하나를 택하라면, 주저 없이 전자를 택하겠다”고 했다. 권력을 감시하고 진실을 기록하는 언론의 기능이 민주주의 존립의 전제조건임을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언론은 테크노파워의 파고 아래 그 존립 기반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실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AI 학습 목적의 저작권 이용에 대한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은 이 위기의 정점이다.

구글 창립자 래리 페이지는 2004년 “사용자가 최대한 빨리 구글을 벗어나 적절한 곳으로 이동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연결’의 철학은 검색 서비스에 수많은 면책 특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구글은 배신했다. ‘배타적 계약’과 ‘자사 서비스 우대(Self-preferencing)’를 통해 사용자를 구글 생태계 내에 머물게 묶어 왔고, 검색 시장과 광고 시장을 독점했다. 웹의 정보를 무임승차하듯 이용했고, 독점력으로 활용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양질의 정보를 생산해 온 언론사들이었다. 언론의 고가치 콘텐츠를 고객의 자양분으로 삼아서, 무료 서비스로 고

객을 모으고, 모아진 고객으로 광고와 부가 서비스로 돈을 벌면서, 언론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왔던 것이다.

## AI 뉴스 무단 학습의 불공정성과 위법성

이제 AI 기업들은 검색 엔진을 넘어 ‘답변 엔진’의 시대를 선언했다. 특히 검색 증강 생성(RAG) 기술은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인터넷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수집·요약해 직접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원문 사이트를 방문할 필요가 없는 ‘제로 클릭(Zero Click)’이 됐다. 실제로 AI 요약이 제공될 경우 사용자의 클릭률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며, 출처 링크 클릭률은 겨우 1% 내외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제 AI 개발사들은 이것이 ‘공정 이용(Fair Use)’이라 주장하고, 언론사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번에도 가장 큰 피해자는 언론이다.

이를 공정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궤변이다. RAG는 답변 생성을 위해 뉴스 원문을 시스템 내부에 일시적으로든 영구적으로든 ‘복제’하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친다. 이는 저작권의 핵심인 복제권 침해이며, AI가 원문의 표현을 상당 부분 그대로 활용해 요약문을 제공하는 것은 저작물의 시장 가치를 직접적으로 대체하는 행위이다.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겠다는 것은 ‘기술 약탈’에 다름 없다.

## 글로벌 스탠다드: 해외의 규제 및 대응 사례

글로벌 주요국들은 오래 전부터 ‘뉴스 콘텐츠의 가치 인정’과 ‘플랫폼의 책임 강화’를 정책의 중심으로 삼아왔다.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의 ‘AI법(AI Act)’을 통해 AI 개발자에게 학습 데이터 내역 공개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DSM(Digital Single Market,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을 통해 언론사의 거부권(Opt-out)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뉴스 사용에 대한 보상권을 확립했다. 호주와 캐나다는 ‘뉴스 미디어 협상법’과 ‘온라인 뉴스법’을 통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뉴스 사용료 협상을 의무화했다. 호주는 협상 불응 시 강력한 부담금을 부과하며, 캐나다는 구글이 연간 약 1,000억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은 2024년 가이드라인을 통해 RAG 방식 등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입력된 저작물의 표현을 그대로 출력하려는 목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 한국 언론의 이종고와 정부·국회의 역할

우리 정부와 국회가 플랫폼의 무임승차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방관해 오는 사이, 브레이크 없는 플랫폼은 지배력을 남용하고, 불투명한 알고리즘과 혈값의 전재료로 언론사를 좌지우지해 왔다. 한국 언론 환경은 지배력을 가진 플랫폼과의 불공정한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

는 악순환의 길을 걸어 온 것이다. 그 결과 극단적인 포털 중심의 뉴스 소비 구조가 고착돼왔다.

이런 상황에서 맞이한 AI의 언론에 대한 약탈적 위협은 그야말로 복합 위기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복합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해야 하고, 플랫폼의 독점 행위에 대해 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의 민주사회 보장기능과 공공성에 대한 분명한 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런 대응 없이 AI 산업 육성이라는 미명 아래, ‘선도산업 육성’에 언론을 희생물로 던지는 식의 접근은 포털과 플랫폼 권력에 AI라는 날개까지 달아주면서, 지배력 남용을 부추기는 꼴이다. 방관을 넘어서서, 언론 약탈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 상황은 단순히 저작권법의 틀에 갇힌 해법이 아니라 공정거래, 저작권, 미디어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적 접근이 시급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우선, TDM 면책 도입은 철회돼야 한다. 오픈 아웃을 허용하는 면책도 우리 현실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오픈 아웃이 검색에서의 배제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언론이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오픈아웃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AI 기업이 대부분 포털이나 검색(AI 검색 포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중

요하다. 거대 플랫폼이 지배력을 무기로 뉴스 콘텐츠를 무상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AI 검색 등으로 트래픽을 가로채는 행위, 불투명한 AI 알고리즘으로 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규제해야 한다. AI와 뉴스 미디어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 일본 공정위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은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이 제도를 도입해 플랫폼 기업이 언론사와 의무적으로 협상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신설해야 한다. 이 규정은 AI 서비스에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언론이 AI와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소비되는 현 상황에서, 언론의 공공성 측면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책 수립과 개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지속가능한 AI 생태계를 위하여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은 양질의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때만 가능하다. 뉴스 미디어의 몰락은 곧 고품질 한국어 데이터의 고갈을 의미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다. 더구나, 저널리즘의 가치는 민주사회의 초석이다. 고품질 저널리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의 발전의 토대이다. 정부와 국회는 눈앞의 기술 육성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공정한 상생의 틀을 세워야 한다.

## “기사 접근 원천 봉쇄하는 ‘열람차단’은 언론·표현 자유 침해”

### 신문협회, 문체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의견 전달

신문협회는 지난 1월 26일 기사에 대한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언론·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열람차단청구권’은 기사의 진실 또는 사생활 침해 여부가 법원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 전에 기사 전체의 열람을 제한하도록 한다”며 “이러한 조치는 독자의 원보도 접근 자체를

차단함으로써 정보 획득의 자유와 언론·표현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사전검열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기사 전체가 아닌 일부 내용을 문제삼아 기사 전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신문협회는 “정치권·권력층에서 비판 보도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려는 목적에서 일부 표현을 문제삼아 기사 전체에 열람차단 청구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이 열람차단 청구 대상에

서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보도’ 등은 제외하고 있으나, 해당 기준이 법률상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신문협회는 기사의 열람차단이 후속보도를 제한해 언론의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언론보도는 1차 보도 이후 후속보도를 통해 사실관계를 보완·확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1차 보도의 일부 표현을 이유로 기사 열람이 차단될 경우, 후속보도의 맥락이 단절되고 독자는 전체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법체계상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절차가 중층적으로 마련돼 있어, 열람차단청구권을 도입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현행 언론중재법은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손해배상 등의 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기사가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피해자가 문제의 기사나 댓글을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도록 ‘정보의 삭제요청’, ‘블라인드 처리’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임시조치 제도를 두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허위 조작정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문협회는 끝으로 “과거 제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폐기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당시 국회에서 제기된 우려를 해소하는 보완 장치 없이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입법의 정당성과 일관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 전통적 광고 의존 탈피... '독자·광고·이벤트' 수익으로 다각화

## WAN '세계 언론 트렌드 전망' 보고서

세계신문협회(WAN-IFRA)는 지난 1월 19일 전 세계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조망하는 '세계 언론 트렌드 전망(2025·2026)' 보고서의 핵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66개국 170여 명의 미디어 경영진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 '3대 수익 모델' 정착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뉴스 산업은 과거의 광고 편중 모델에서 벗어나 '3대 수익 모델(독자 수익·광고·이벤트)' 중심의 안정적인 구조로 진입했다. 특히 디지털 혁신 속에서도 인쇄 광고(21.2%)와 인쇄 부수(22.4%) 수익은 전체 수익의 43.6%를 차지하며 여전히 단일 수익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유지했다.

인쇄 수익의 절대적인 비중은 여전히 높지만, 디지털 및 기타 수익원이 빠르게 성장하며 그 격차를 좁히고 있었다.

디지털 구독과 디지털 광고 수익은 전체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이벤트·B2B 서비스·전자상거래 등 '기타 비즈니스' 수익이 25.4%까지 급성장해 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수익 축으로 자리 잡았다.

### 생성형 AI의 전략적 활용

챗지피티(ChatGPT) 출시 이후 지난 3년간 인공지능(AI)은 단순한 기술적 보완재를 넘어 언론사 경영의 최우선 전략적 핵심 과제로 자리 잡았다. 특히 글로벌 미디어 리더들은 미래 성장을 위한 3대 핵심 투자 분야로 △AI 및 자동화 △데이

터 분석 및 인텔리전스(이해·예측·추론) △독자 수익 및 제품 개발을 지목하며 기술 중심의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크리에이터와의 전략적 공존과 협업

글로벌 언론사의 60.3%는 개별 크리에이터의 부상을 위협이 아닌 '새로운 협업의 기회'로 인식하며,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응답자의 약 33%는 기존의 뉴스 제작 관행을 탈피해 기자가 직접 화자로 나서거나 모바일 플랫폼에 최적화된 '뉴미디어 및 크리에이터 중심의 독자 참여형 콘텐츠'를 뉴스룸 내에서 직접 제작할 의향을 밝혔다.

### 언론 자유 위협하는 디지털 공간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와 저널리즘

을 향한 전방위적 공격이 지속되면서, 언론의 자유가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실제 응답자의 45.5%가 지난 1년간 자국의 언론 자유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으며, 개선됐다는 응답은 10.6%에 불과했다.

특히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온라인 괴롭힘(57.8%) △정보 접근권 차단(50.0%) △사이버 공격(45.3%) 등 디지털 공간이라는 공통적인 답변을 보였다.

### 고용 생태계의 재편

2025년 한 해 동안 영국과 미국 뉴스룸에서 발생한 감원 규모는 3,000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답자의 40.7%는 지난 12개월

간 오히려 자사 인력 규모가 '확대'됐다고 답해 시장별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보고서는 '개발도상국 언론'은 고용 안정세를 보인 반면, '선진 언론'은 고용 시장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응답자 3분의 2가 "미래 낙관" 전망

WAN 조사 결과, 글로벌 미디어 리더들은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특히 응답자의 63%가 향후 1년 내 단기 전망을 낙관했으며, 3년 뒤 장기 전망에 대해서도 65%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미디어 리더들은 저널리즘 전반의 위기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사만의 수익 다각화와 기술 도입 성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확신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 '저널리즘+기술+독자 참여' 3각 축으로 디지털 저널리즘 혁신

## '세계 디지털 미디어 어워즈' 12개 우수사례 선정

세계신문협회(WAN-IFRA)는 지난 8일 디지털 미디어 혁신 우수사례(Best Practice in Innovation)를 담은 보고서를 소개했다. 보고서에 소개된 사례는 매년 뛰어난 디지털 저널리즘을 선정하는 세계신문협회의 '세계 디지털 미디어 어워즈(Digital Media Awards Worldwide)'의 수상작이다.

### 로이터(영국)

#### 데이터 시각화

사내 시각화와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담당하는 부서인 '로이터 그래픽스(Reuters Graphics)'는 3D 모형화, 시뮬레이션과 탐사 보도 기법을 활용해 2024년 발렌시아 고층 건물 화재 참사를 정밀하게 재구성했다. 스페인에는 가연성 외장재에 대한 중앙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지 않아 이러한 데이터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팀은 기술 인증서와 건축 도면을 분석하고, 화재 엔지니어, 외장재 전문가, 소방관과의 인터뷰를 시행해 자체 데이터셋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가연성 외장재가 화재의 확산에 미친 영향과 화재 안전 정책의 허점을 규명했다.

### 연합데일리뉴스(UDN, 대만)

#### AI 활용한 수익 전략

△타깃 광고(광고 위치·대상 최적화) △콘텐츠 큐레이션(구독 전환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를 AI가 선별) △추천 시스템(나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다른 사용자들이 좋아했던 콘텐츠 추천) 전반에 AI를 적용했다. 그 결과 △광고 클릭률(CTR) 200% 이상 △구독 전환율 220% 이상 △헤비 유저 클릭률(CTR) 150~277% 증가 등 전반적으로 200% 이상 성장을 거뒀으며, 수익 모델을 '제품 중심'에서 '독자 가치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했다.

###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통(독일)

#### 최우수 뉴스 웹사이트

자사 웹사이트(FAZ.NET)를 신속하고 개인화된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했다. 이용자의 관심사·이용 시간·위치 등에 맞춰 콘텐츠 추천·광고·페이월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고, 스크롤·읽기·공유 등 이용자의 상호작용 데이터를 업데이트해, 로그인 없이도 정교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했다.

### 데일리 매버릭(남아프리카공화국)

#### 최우수 혁신 디지털 제품

'매니페스토 메이햄!(Manifesto MAYHEM!)' 프로젝트를 통해 방

태하고 복잡한 선거 공약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카드 형태로 뉴스를 시각화했다. 12개 주요 정당의 정책(예, 일자리, 범죄·부패, 에너지·전력 등)을 선별해, 유권자가 가장 관심 있는 주제 중심으로 분류한 뒤, 각 정당의 정책 입장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요약했다.

### 더 힌두(인도)

#### 최우수 디지털 광고 제품

인도 타밀나두주의 주도인 '첸나이' 건립 385주년을 계기로,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메이드 오브 첸나이(Made of Chennai)' 캠페인을 추진했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인터랙티브 퀴즈, 사진 공모 등), 지면 콘텐츠(도시 역사학자들과 역사·문화·정체성을 심층 조명하는 콘텐츠 제작),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유산 도보 투어, 푸드 페스티벌, 공연 등)를 결합해 도시의 정체성을 재조명했다.

### 라 나시온(아르헨티나)

#### 최우수 뉴스룸 AI 활용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대통령의 연설을 분석하기 위해 맞춤형 AI 모델을 자체적으로 구축했다. AI를 활용해 대통령 취임 첫째의 총 142건의 연설·인터뷰, 89시간

분량의 오디오 데이터를 수집·분석했으며, 대통령 담론의 반복 패턴·정서·언어 전략을 측정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

### 체케아도(아르헨티나)

#### 최우수 팩트체킹 프로젝트

장기 프로젝트인 '프로메사스 체케아다스(Promesas Chequeadas, 검증된 공약들)'를 통해 대통령의 공약 이행 여부를 투명하고 객관적인 증거 기반 방법론으로 추적했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제시한 20개 핵심 공약을 △이행됨 △진행 중(의미 있는 진전) △진행 중(제한적 진전 또는 지연) △미이행 등 4가지로 분류해, 공공의 신뢰를 공고히 다지는 데 기여했다.

### 베르덴스 강(노르웨이)

#### 최우수 비디오 활용

2024년 미국 대선 보도 당시, 모바일에 최적화된 세로형 비디오 형식을 도입해하고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포맷을 혁신했다. 특히 기자는 카메라를 직접 응시하며 대화하듯 말하고, 실시간 댓글 기능을 통해 시청자의 질문과 반응을 즉각 반영했다. 이는 젊은 세대의 이용 습관에 맞춘 소셜미디어 지향적 뉴스 경험을 제공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 텔레그래프(영국)

#### 최우수 뉴스레터

금융 뉴스레터 '백만장자 되는 법(How to Become a Millionaire)'은 6주간 전문가의 식견과 AI의 자연스러운 문체를 결합한 맞춤형 콘텐츠를 선보였다. 또한 복잡한 금융 주제를 단순화하고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 뉴스레터 구독자는 평균적으로 주당 4회 텔레그래프 웹사이트를 방문하며, 평일 방문 가능성도 25% 증가했다. 비구독자의 구독 전환 가능성은 44% 증가했다.

###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홍콩)

#### 최우수 디지털 구독

프리미엄 유료 서비스 'SCMP 플러스(SCMP Plus)'를 통해 중국 관련 정보에 민감한 전 세계 전문가 그룹을 공략했다. 주요 콘텐츠·기능은 △일일 큐레이션 뉴스레터 △오피니언 사전 열람 △인터랙티브 데이터 시각화 △인물·기업·이슈 간 연결 관계 시각화 △정치·경제·외교·비즈니스 주요 일정 등이다. 엄선된 심층 분석과 전문 데이터 등 독점 콘텐츠를 제공해 독자들을 더 높은 단계의 유료 멤버십으로 유도했다.

### “독자 가치 중심으로 뉴스 생산해야”

중부매일 창간 36주년 기념식

중부매일(발행인 한인섭)은 지난 1월 20일 창간 3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한인섭 발행인은 기념사를 통해 “모든 구성원이 뉴스 콘텐츠 제작자이자 전문 기획자가 돼야 한다”며 “독자와 대중이 어떻게 뉴스를 소비하는지, 어떤 가치를 존중하는지 살펴 콘텐츠를 생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쌓아 온 종이신문 역사 위에 뉴미디어라는 미래를 접목해 더욱 발전시키자”고 강조했다.

#### ▶3면에서 계속

#### 그루포 엘 코메르시오(페루) 최우수 이용자 참여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페루 요리는 강력한 문화적 연결고리이다. 이러한 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페루의 미식 문화를 기념하는 인터랙티브 투표 캠페인인 ‘프리미오스 소모스(Premios Somos)’를 열었다. 셰프, 레스토랑, 생산자 등 페루 요리 관련 42개 카테고리에서 독자들의 투표를 유도해 독자 참여의 장으로 연결했다. 독자들이 직접 맛집을 선정하는 양방향 투표와 멀티 플랫폼 스토리텔링을 결합해 충성

독자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 프리사 미디어(칠레) 최우수 오디오 활용

팟캐스트 시리즈 ‘숨을 쉬어야 해요(I Need to Breathe)’를 통해 칠레의 영향력 있는 뮤지션 호르헤 곤살레스(Jorge Gonzalez)의 삶과 작품을 몰입형 오디오 다큐멘터리로 재구성했다. 뉴스룸에 보존된 희귀 음성 자료에 입체 음향 기술을 접목해 청취자가 곤살레스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듣는 듯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오디오 다큐멘터리의 표준을 제시했다.

#### 일간신문 및 뉴스통신 기사 114건, 광고 52건 주의 결정 신문윤리위 1월 심의 결과

신문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1월 14일 제1,004차 회의를 열고 신문협회 회원사의 기사 114건과 광고 52건에 대해 신문윤리강령 등 위반으로 각각 ‘주의’ 결정을 내렸다(표). 심의결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윤리위 홈페이지(www.ikp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월 기사 및 광고 심의 현황

		구분	건수
일간신문 및 통신	기사	주의	114
		경고	0
	광고	주의	52
		경고	0
온라인 신문	기사	주의	257
		경고	0
	광고	주의	90
		경고	1

### 회원사 동정

#### 강원도민일보, ‘제1회 춘천소양강 마라톤대회’

강원도민일보(발행인 김종석)는 3월 21일 제1회 춘천소양강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마라톤은 병오년 새봄을 맞아 운수대통과 대박·승진·번영의 기회를 염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댐 하류주차장에서 출발할 예정이며 종목은 5km와 10km다. 참가비는 코스에 상관없이 4만 원이다. 참가 신청은 대회 홈페이지(www.ccpmarathon.kr/spring)에서 가능하다.

#### 경기일보, ‘제24회 경기마라톤대회’

경기일보(발행인 신항철)는 4월 19일 수원화성 용·건릉 구간에서 열리는 ‘제24회 경기마라톤대회’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1만 명 모집한다. 참가종목은 △공인 풀코스(42.195km) △공인 하프코스(21.0975km) △단축마라톤(10km) △건강마라톤(5km)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회 홈페이지(www.kgmarathon.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국제신문, ‘2026 광안대교 국제걷기축제’

국제신문(발행인 황문성)은 5월 10일 벡스코 광장에서 개최하는 ‘2026 광안대교 국제걷기축제’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1만 명 모집한다.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축제는 벡스코를 출발해 광안대교 상판을 지나 국립부경대학교 운동장까지 약 7.5km를 걷는다. 참가비는 3만 원이며 문의는 국제신문

문화사업국(051-500-5227).

#### 대한경제, ‘제17회 대한경제 마라톤대회’

대한경제(발행인 김상수)는 4월 4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의광장에서 열리는 ‘SAFE KOREA 제17회 대한경제 마라톤대회’ 참가자를 3월 8일 17시까지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으로 7,000명이다. 종목은 △하프코스 달리기 △10km 달리기 △4km 걷기이며, 참가비는 각각 6만 원, 5만 원, 4만 원이다. 신청은 대회 홈페이지(www.dnewsrun.co.kr)에서 가능하다.

#### 머니투데이, ‘제23회 대한민국IB대상’ 공모

머니투데이(발행인 강호병)는 오는 4월까지 ‘제23회 대한민국IB대상’ 수상자 후보를 모집한다. ‘대한민국 IB대상’은 투자자와 기업 간 가교 역할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을 시상하는 상이다. 공모 대상은 증권사, 사모펀드 운용사,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관련 기관이다.

#### 전자신문, ‘제27회 공공솔루션마켓’

전자신문(발행인 강병준)은 오는 27일 코엑스 그랜드볼룸 전관에서 ‘제27회 공공솔루션마켓’을 개최한다. 공공솔루션마켓은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정보화 시장 전문 컨퍼런스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 대상은 공공분야 정보화담당자 및 기업 관계자이다. 사전등록은 오는 6일까지 전자신문 정보사업국 홈페이지(www.sek.co.kr)에서 가능하다.

#### 조선일보, 겨울방학 초등 NIE 특강 수강생 모집

조선일보(발행인 홍준호) NIE 교육센터는 ‘2026년 겨울방학 초등 NIE 특강’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총 240명 모집한다. 수업은 2월 2일부터 27일까지 주 1회, 회당 2시간이며 수강료는 회당 5만 원이다. 수업 장소는 에듀조선 NIE 논술학원과 조선일보 뉴지엄이다. 수강 신청은 홈페이지(www.nie.chosun.com)에서 가능하다.

#### 중부일보, ‘제2회 워너블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중부일보(발행인 최윤정)는 3월 15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제2회 중부일보배 워너블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참가 대상은 7세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이며 총 40팀을 모집한다. 각 학년별로 △우승 △준우승 △공통 3위에게는 트로피를 수여하며, 참가자 전원에게 메달을 지급한다. 참가비는 5만 원이며 문자 및 유선 또는 메일(qz8559@naver.com)로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 신문협회보

발행인	임채정
편집인	정우현
제작	한국신문협회
발행처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302호
인쇄	삼아인쇄
창간일	1985년 4월 15일
등록번호	서울, 다50673
대표메일	webmaster@presskorea.or.kr

##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이 문구는 서약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갱신하고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세요.

## 임의 사용 NO!

서약사만의 권리를 지키는 기회입니다.

#### ❓ 왜 갱신했나요?

- ❑ 일부 비서약사의 무단 사용,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 ❑ 서약사의 권리보호 및 브랜드 가치 강화를 위해
- ❑ 책임 있는 언론문화 정착을 위해

